

전업 농가(2,700m² 이상) 복구지원 절실

- 천재지변, 폭설피해 고른 혜택 돌아가야 -

◇ 취재 / 김동진 기자/차장
(dj@poultry.or.kr)

3 월들이 100년만에 내린 최악의 폭설로 그 동안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시름을 앓던 양계농가들이 또다시 실의에 빠지게 되었다. 이번에 내린 폭설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었다. 그 동안 폭설은 재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민하던 정부도 이러한 실상을 파악하고 폭설피해를 입은 전 지역에 대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취해진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피해발생 5일만에 이루어져 2002년 태풍루사(17일), 2003년 태풍 매미(10일)보다 훨씬 빨라 피해정도가 얼마나 컷는지 짐작할 수 있다.

지구는 지속적인 온난화추세로 지난 140년 동안 0.6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7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름철의 기온 상승추세는 작으나 겨울철과 봄철의 기온상승 추세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일 10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빈도는 최근 10년간 뚜렷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일 150mm 이상의 집중호우

도 상대적으로 추웠던 1971~1980년 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앞으로 천재지변에 대한 대책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온실 기체 증가, 도시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막을 수는 없지만 사전 대비만 잘하면 상당부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폭설 피해 현황

근년들어 폭설로 피해를 입었던 해는 지난 2001년으로 당시 1, 2월에 2~3차례 폭설(32년만에 최고)에 의한 피해액도 과거 6년간 전체 피해액의 57배에 이르는 등 대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당시 본회에서 집계한 폭설피해 현황을 보면 29개동이 완파내지 반파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 지역은 주로 경기 북부 지역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금년의 피해는 2001년도와는 피해 지역이 충청도, 경상도 등으로 피해지역이 넓고 피해 규모도 6천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중

양재해대책본부는 밝혔으며, 축사의 경우 6천 985동이 피해를 입어 1천7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본회가 12개 저희 및 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40개 회원농가의 347동(약 59,549평)이 파손되어 최소 44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31만수가 폐사한 것으로 가집계되었다. 그러나 비회원들과 피해액의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질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무너진 전체 280여개 육계사 중 77%인 220동이 완파되는 등 육계사 파손이 심각하였다. 지역으로는 청주, 논산, 충주, 천안, 흥성이 가장 피해가 심하였고, 특히 보온 덮개식 계사, 무허가 계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폭설에 따른 농가 피해현장

본 기자는 폭설 피해가 난 10일 후 충남 예산에서 4동(640평, 약 3만수 규모)의 육계사가 무너진 박영수(57세) 사장을 찾아보았다. 연일 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박 사장은 당시 70cm가 넘는 눈이 짧은 시간에 내리는 바람에 무너지는 것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 폭설피해를 입은 박영수 사장이 무너진 계사내부에서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고 당시를 회고했다.

5일 아침 눈을 떠보니 한동이 이미 무너져 내졌고, 나머지 계사도 눈을 쓸어내려 보기도 하였지만 불가항력적이라고 말했다. 이 농장은 지난 2001년 폭우로 인해 물이 농장을 덮친 후 예산군의 지원을 받아 철판 스테이트로 지붕을 보강하여 어느 농장 보다도 튼튼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4년전인 2000년부터 육계를 시작한 박 사장은 당시 건물 건축비만 1억2천만원이 들었으나 현재 규정상 철재 파이프 하우스로 건축되었으므로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금액은 3천여 만원(국고 45% 지원) 밖에 안되며 이마저도 선지원이 안될 경우 복구에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임을 밝혔다.

충북 보은의 안효두 사장(본회 보은지부장)의 경우는 더욱 한탄스럽다. 다행히 병아리가 입추되기 3일 전 눈이 쏟아져 열풍기에 의존하고 한편에서는 지붕을 쓸어내렸지만 1m가까이 쌓이는 폭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 사료반만 남기고 주저앉아 버린 계사들…

결국 계사 1,100평 중 900평이 완파되면서 육계업을 접어야 할 판이다. 안 사장은 남들은 특별 재해 지역선포로 규모가 적은 농가에서는

그나마 보조금과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규정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라며, 농신보에서 3억까지 연리 3%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자 없다 보면 오히려 빚만 더 지는 꼴이기 때문에 지원규모의 상한선을 철폐하든지 피해 본 만큼만은 반드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3. 정부의 지원 대책

폭설이나 태풍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피해농가는 우선 피해사실을 가까운 읍, 면, 동에 알리고 협조를 받아 사진촬영을 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현황이 정부(재해대책상황실)에 보고되면 복구계획이 확정되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마련된다. 표 1은 양계분야와 관련하여 재해시 복구비용 산정 기준 표이다.

양계분야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기존의 1,800m³이내의 농가로 제한 되었던 것이 2,700m³(약 818평, 약 4만수 규모 이상)로 지원 규모가 높아졌으며, 금년과 같이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되면서 보조비율이 35%에서 45%로 늘고, 선지원 후조치 등이 내려졌다. 따라서 무허가와 허가농가에 관계 없이 2,700m³(약 818평) 이하의 농장에는 국고에서 45%의 복구지원비가 지원되고, 또한 특별재해지역 선포로 인해 피해 농가당 조건에 따라 200만원의 특별

위로금이 지원되며, 2,700m³가 넘는 농가에게도 2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키로했다. 이번의 경우 특별히 선지원 후조치가 내려지면서 과거 복구를 한후 자금을 받았던 불리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단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후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본회를 비롯, 양계농가들은 지금까지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및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재해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축사면적 1,800m³(545평)이상의 재해농가가 축사를 복구하고자 할때 국고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1,800m³이상은 위로금조차도 지급되지 않아 보조에 대한 상한선 폐지 등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축사면적 2,700m³에서 사육할 수 있는 닭의 수는 종계의 경우 13,000수, 육계와 산란계는 40,900수内外로서, 전업농규모는 3~5만수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부가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규모를 늘려놓고 이제와서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

표1.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구분	양계	규격	단가(원/m ³)	지원기준	비고
축사	계사	산란계사	142,000	보조 35%(국고 25%, 지방비 10%)	국고지원 2,700m ³
		육계사	99,000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5%	미만
		철재		특별 재해지역선포시 보조 45%	(종전 1,800m ³)
		(파이프보	39,000	(국고 35%, 지방비 10%)	
		온도개형)		무허가 지원대상 포함	
가축	육계	병아리	427	국고 40%, 지방비 10%	20일령 이상 또는
		중추	670	융자 30%, 자담 20%	600g
	산란계	병아리	553		70일령 이상 또는
		중추	1,700		850g 이상
축사부	분뇨처	닭(평사)	21,000		
		닭(케이지)	34,000		
대시설	리시설				

*이번 폭설의 경우 선지원 후정산으로 이루어짐(단 무허가는 후지원)



▲ 지난 3월 19일 행정자치부 중앙대책상황실을 방문한 농가들이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에 상한선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도저히 구제를 받을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폭설피해로 정부에서는 특별경영자금 65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있으며, 재해대책자금을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최고 3억원(연리 3%)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라도 이번 대설피해 농가들은 거의 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연체가 있는 농가들도 부채대책자금 또는 농업경영회생 자금 지원여부를 최우선으로 심사하여 경영회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체를 우선 해소하고 재해 복구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규모 농가들의 경우 지금까지 부채가 많아 농신보 지원을 받을 염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4.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시급

양축가들은 축사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폭설

피해를 입은 모든 농가에게는 복구지원비가 지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원상 복구(신축)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종전 사육면적에 관계없이 하루빨리 지원이 이뤄져 폭설피해에 따른 농가의 아픔이 조기에 아물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재해대책본부 서상덕 계장은 재해 보상의 본 의미는 재생의 능력이 없는 힘없는 국민들(피해국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으며, 국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피해면적에 대한 상한선을 풀었을 경우 축산 외의 산업들이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아 국고의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양계업은 물론 축산업은 타 산업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어 양축가들을 감싸 안아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번 기회에 건축물에 대해서 복구비가 산정되어 지원되는 것을 내부 시설까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에는 미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과 같은 피해는 불가항력적이라고 하지만 준비만 하면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피해농가중 한 농가는 다음 계사를 건축할 경우 출하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비워놓고 양쪽 1/3지점에 버팀목을 준비해 두었다가 겨울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탱하는 방법이 폭설을 예방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귀띔해주기도 하였다. 무허가의 양성화를 바라기 보다 이 기회에 표준설계도에 의한 튼튼한 계사를 설계하여 짓는 것도 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양계**